

시진핑 집권 3기 '홍색' 더 짙어지고 '전랑외교' 강화

(사회주의 성향)

(늑대전사)

20차 당 대회 개막식 업무보고
사회주의 혁명문화 고취 강조
"대만통일 무력 사용 포기 안해"
역사 논쟁 등 한국과 갈등 우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식에서 행한 업무 보고를 통해 중국이 그간의 대내외 정책의 방향을 고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의 집권 3기는 대내적으로 '홍색' (사회주의 성향)이 짙어지고, 대외적으로는 전랑외교(戰狼-늑대전사)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 주석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지점으로 삼아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고 혁명문화를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대한 응집력과 지도력을 구비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건설하고 당의 이데올로기 공작의

주도권을 단단히 장악하고, 전면적으로 이데올로기 사업의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선전과 교육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애국주의와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심화하고, 당과 민족 부흥의 큰 임무를 맡을 시대의 신인을 함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가문화의 소프트파워와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며 "중화문명의 전파력과 영향을 증강하고 중화문화의 입장을 견고히 지키고, 중국의 이야기를 잘 설파"해 "중화문화가 더욱 세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전체 중화의 자녀들을 동원해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몽' 실현을 둘러싸고 뜻과 행동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가치관과 중화민족을 강조한 것은 결국 중국 사회의 '내향성 강화'를 예고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국제사회와의 인적 교류를 최소화한 상황에서 중국과 외부 세계, 특히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정서적 거리는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해 보인다. 특히 시 주석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는 것을 주축으로 삼아 당의 민족 공작을 강화하고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청동기 유물 전시에 중국 측이 한국 역사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뺀 일과 같은 한중간 역사 논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대외 정책의 경우 시 주석의 이날 발언은 대체로 전랑외교로 불리는 현재의 기조를 견지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른바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의 첨예한 갈등을 불사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시 주석은 인류운명공동체론과 다자주의, 패권 반대, 평화 외교 정책 등을 거론했다.

그와 동시에 '투쟁'이라는 단어를 17차례 사용해 자신의 집권 기간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규정된 영역에서 양보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들

러싼 한국과의 갈등 때 중국이 경제·문화 영역에서의 보복 조치로 맞섰던 일도 이 같은 대응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시 주석은 '건곤일척'의 전략 경쟁 상대인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냉전사고, 내정간섭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그간 중국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론해온 반미 레토릭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대만 문제가 마·중간 최대 갈등 현안임을 고려할 때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옵션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과 대만 문제를 둘러싼 '타협'의 여지를 좁힌 측면이 있었다.

시 주석은 2019년 '대만 동포에 고하는 글 발표 40주년 기념회' 연설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무력 옵션 포기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3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5년마다 열리는 자국 최대의 정치행사, 그것도 자신의 3연임이 결정될 무대에서 언급한 것의 무게는 달랐다. /연합뉴스

기후변화 때문에 알래스카 대게도 사라져

미국 알래스카 인근 해역의 대게 수가 최근 3-4년 새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올해 대게잡이가 금지됐으며, 과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남획보다는 기후변화를 꼽고 있다고 CNN 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래스카 어업위원회와 북대평양어업관리위원회(NPFMC)는 지난주 배랑해의 대게 개체 수가 어로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또 알래스카 남서부 베링해 연안 지역인 브리스틀만의 붉은 킹크랩 어로 작업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알래스카 어류·야생동물부 벤저민 데일리 연구원은 "베링해의 대게가 2018년 80억 마리에서 지난해 10억 마리로 급감했다"며 "베링해에서 잡히는 게 중 가장 많이 잡히는 대게가 이렇게 감소한 것은 충격적이며 주목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어업 관계자들은 이들 해역의 어로작업 금지 이유로 남획을 꼽는다.

알래스카 어류·야생동물부 마크 스티허트 해저 어류·갑각류 어업 조경관은 "자연에서 번식해 늘어나는 개체보다 잡히는 개체가 더 많다"며 "베링해 어족자원 조사 결과 올해 성체 수컷 대게가 지난해보다 40%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배랑해의 대게 감소 원인을 기후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NOAA) 코디액어업연구소 마이클 린츠 소장은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가 대게가 사라지게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남미 신분증·공식 문서 '제3의 성' 표기 인정 잇따라

중남미 국가 공식 문서에서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 표기를 공식 인정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중남미 매체 인포바에 따르면 칠레 정부는 지난 14일 역사상 처음으로 성별 표시란에 'X'로 인쇄된 논바이너리(non-binary) 신분증을 세인 시엔푸에고스(29)에게 발급했다.

논바이너리는 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을 뜻하는 용어다.

칠레에서 성중립 다양성을 위한 사회단체를 이끄는 시엔푸에고스는 제3의 성을 공식 문서상으로도 확인받기 위해 진행한 9년간의 법정 투쟁에서 승소하면서 논바이너리 신분증을 받게 됐다.

그는 "이것은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의 승리"라고 말했다.

칠레는 성 소수자 정책과 관련해 진보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중남미에서 성 중립적 신분증명서를 인정한 건 지난해 4월 아르헨티나가 처음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주민등록증과 여권에 남성(M)·여성(F) 외에 'X' 성별 옵션을 추가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가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멕시코 주점 총격 사건 12명 사망 15일(현지시간) 총격사건이 발생해 12명이 숨진 멕시코 중부 과나후아토주 이라푸아토시의 한 주점 밖에서 희생자 가족들과 친구들이 슬퍼하고 있다. 과나후아토주는 마약 카르텔간 무력충돌이 잦아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연합뉴스

OPEC+ "감산 결정 러시아 위한 것 아니다"

"순전히 경제적 지표에 따른 결정"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최근 감산 결정은 순수하게 경제적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이탐 알가이스 OPEC 사무총장은 이날 알제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감산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감산은 순수하

게 기술적인 결정으로 현재 뿐 아니라 미래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산 결정으로 미국의 눈 밖에 난 중동 산유국들도 이날 일제히 항변에 나섰다.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OPEC+의 만장일치 감산 결정이 순전히 경제적 이유에 따른 것임에도 누군가는 '사우디가 러시아의 편에 섰다'고 주장한다"고 썼다.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인 그는 이어 "이런도 OPEC 회원국인데, 그렇다면 사우

디가 이란과도 편을 먹었다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앞서 이라크도 OPEC+의 감산이 온전히 경제적 지표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OPEC+는 지난 5일 월례 장관급 회의에서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무함마드 왕세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지난 7월 직접 사우디를 방문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미국은 감산 결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고, 백악관은 연일 강경한 메시지로 사우디를 몰아붙였다. /연합뉴스

미국 11월 중간선거 공화당 하원 다수당 차지 CBS 예측조사 결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미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12-14일 등록 유권자 20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224석, 민주당이 211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다.

CBS는 "낙태권 폐지와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며 지난 두 달간 공화당의 상승세가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공화당 지지가 굳어가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실제 응답자의 65%는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좋아지고 있다는 반응은 15%에 그쳤다.

거주지에서 기쁨감이 상승하고 있다는 답변도 63%에 달했고, 하락하고 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지난 8월의 경우 같은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낮아지고 있다고 했고, 상승 중이라는 답변은 16%로서 정반대 경향을 보였다.

유권자들은 무엇이 불가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지는 질문엔 '공급망 및 제조업 문제' (63%)를 가장 많이 거론했다. 이어 국제적 요인(58%), 민주당의 정책(47%) 순이었다. /연합뉴스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